

북한 핵 사태와 언론의 대응: 뉴스 생산과정을 중심으로

이 광 업
YTN

I. 문제 제기

1994년 6월,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계기로 북한 핵 문제는 한국언론의 주요 의제로 다뤄져 왔다. 그 해 10월 미국과 북한이 체결한 제네바 합의로 북한 핵은 해결 단계로 접어드는 듯 했지만 2002년 10월 미국이 북한의 농축우라늄 개발 시도를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2차 북한 핵 위기는 다시 점화됐다. 그리고 지난 10월 북한은 마침내 핵 실험을 감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북한의 핵 보유 움직임은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깨고 국민의 안보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은 13년여 동안 이와 관련한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왔다. 양적으로 보면 북한 핵 위기에 대한 보도는 부족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과연 언론이 대외정책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정치권력의 감시자로서, 또 독자나 시청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적절히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¹⁾

언론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여론 형성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결정과정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파급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언론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다. 보도에 신뢰감이 없고, 반공주의 이념이 여전히 팽배하며, 획일적인 보도성향을 보이는 가운데 상업주의와 선정주의가 지나치게 표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김정일과 그의 가족의 스캔들에 대한 보도가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현상이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북한 핵 사태에 언론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보도 속에 이뤄지고 있는 관행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게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슈메이커와 리즈²⁾(Shoemaker & Reese, 1991)는 무엇이 뉴

1) 이우영. (2006).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 필요. 『신문과 방송』 2005년 1월호. 73.

2) Shoemaker, P. J. & Reese, S. D. (1992).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스가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산과정 속의 관행(routines)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삼각 축이 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약요인들이라고 제시했다. 그 삼각축은 처리자(processor)로서의 언론사, 제공자(supplier)로서의 취재원, 그리고 소비자로서의 수용자다. 한마디로, 이익을 추구하는 언론사가 뉴스 원재료를 관리들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소비자에게 전달한다는 내용을 삼각축으로 압축해 설명하고 있다.

슈메이커와 리즈의 분석 틀은 북한 핵 보도와 관련한 언론의 대응을 관찰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북한 핵문제처럼 취재원의 영향력과 언론사의 편집방향이 중요한 분야가 없기 때문이다. 현직 언론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삼각축 가운데 언론사와 취재원을 중심으로 북한 핵 뉴스가 어떠한 생산과정을 거치는지를 소개하면서 언론의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언론사의 관행

1. 출입처 중심의 취재망

언론사들은 대부분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를 주요 출입처로 삼아 전담 기자들로 하여금 기사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각사는 정치부에 외교안보팀을 두거나 외교안보팀을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소속된 전담기자들 가운데 적게는 한 명, 많게는 세 명을 각 출입처에 두고 각 부처가 공급하는 원재료를 가공하거나 독자적인 취재망을 가동해 보도하고 있다.

현재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등 통일외교안보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들의 소속사를 보면 통신사(연합뉴스) 1개사, 종합일간지 11개사, 경제지 5개사, 영자지 2개사, TV 6개사, 라디오 방송 3개사 등 28개사다. 여기에 일부 인터넷 언론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욱 늘게된다. 다만, 국방부의 경우, 아직 인터넷 언론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남북 관계의 전반을 다루는 출입처이다. 북핵문제를 비롯해 남북대화 와 이산가족, 인도적 지원 등 북한과 관련된 주요정책이 통일부에서 나온다. 최근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협사업도 주요 취재대상이다. 외교부는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북핵의 외교적 해결을 주도해 왔다. 전반적인 남북관계는 통일부 소관이지만 북핵문제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외교부의 정책흐름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실제로 6자회담이 열리면 외교부 담당기자들이 주로 취재를 담당하게 된다.

남북관계는 군사문제를 빼고는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국방부도 매우 중요한 출입처이다. 북한 핵 실험 등 남북관계의 긴장이 높아질 때 국방부의 정보망이 가동되면서 안보 관련뉴스가 쏟아지게 된다. 그리고 청와대는 남북관계의 총 사령탑 역할을 맡고 있다. 각 부처에서 입안한 주요 정책들은 빠짐없이 청와대와 협의를 거치고 때로는 청와대가 정책을 주도하기도 한다. 모든 정책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당연히 예의 주시 대상이다.

출입기자들은 각 부처에서 담당 분야의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동시에 다른 부처에서 나온 브리핑이나 주요 정보사항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북핵과 같은 남북관계 관련정책은 어느 한 부서가 배타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전협의를 조율을 거치기 마련이다.

언론사의 취재 시스템이 출입기자 중심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전문기자의 부재를 말한다.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등 주요 출입처에는 마감시간이나 방송시간에 쫓기더라도 균형감각을 갖고 심층 분석기사를 쓸 수 있는 기자들이 드물다. 언론사의 출입처는 대부분 순환근무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한 기자가 외교안보 분야만을 꾸준히 추적 보도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통일부 담당기자들의 경우에는 과거 전문성을 인정받은 기자들이 몇 명 있었으나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그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남북관계 뉴스 역시 출입처 중심의 취재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높은 외신 의존도

북핵뉴스는 다른 뉴스보다 외신에 대한 의존정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북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이고 이를 중재하는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또 일본은 비교적 정확한 고급 해외 정보망을 갖고 있고 기자들의 규모 또한 한국에 비해 훨씬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소식은 일본 언론에서 1보가 나오면서 확인이 됐다.

국내언론사들은 주요 출입처 외에 국제부 소속의 특파원을 워싱턴, 도쿄, 베이징에 파견해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보도하지만 아쉽게도 현지 공식 브리핑과 언론 보도를 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국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뉴스를 현지에서 직접 발굴해 전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래서 결국 AP나 로이터, 교도, 신화통신 등 해외통신사와 각국의 주요 언론보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

다.3)

외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다 보면 독자나 시청자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혼란만 부추기게 된다. 지난 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북한 핵실험설은 부시 행정부내 강경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지난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2차 핵실험이 실시됐다고 일본의 한 방송사가 속보를 전한 적이 있는데 일부 국내언론은 이를 지나치게 비중 있게 보도하다가 나중에 사실을 바로 잡는 해프닝도 빚어졌다.

외신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독자나 시청자에게 북핵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4) 통신사나 각국의 주요 언론사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북핵이슈를 오랫동안 보도해 온 미국의 권위자인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역시 클린턴 행정부 뿐 아니라 부시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인덱스 가설(Indexing Hypothesis)대로 정부관리들의 논의를 지침으로 삼아 보도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언론은 정부에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정책을 펼쳐 나가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실제로 언론의 현실은 외신에 의존적인 상황이다.5) 최근 외국언론사의 북한 관련보도를 분석한 한 북한 전문기자는 “외신들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에 근거해 사실을 부풀리거나 과장하고 인과관계를 오도함으로써 ‘악의 축’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외신보도에 다시 한번 의문부호를 찍어보고 추가 취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3. 간접 취재의 한계

남북관계 보도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어느 분야의 기사보다도 오보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김정일 북한 위원장의 중국 방문설, 미국 북한전문가의 가상 에세이 보도, 중국의 BDA 계좌 해제설 등은 최근 여러 차례 신문과 방송의 주요 뉴스로 다뤄졌지만 나중에는 결국 오보로 드러났다. 수용자를 혼란에 빠뜨리게 된 데는 취재대상인 북한의 특수성 탓이 크다. 출입처 가운데 유일하게 북한 관련 뉴스는 확인을 위한 직접 취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언론사들 사

3) 이철기, (2005), 맹목적으로 베끼고 앞장서 부풀리고, 『신문과 방송』 2005년 7월호, 111.

4) Lee, K. Y. (2005). A content analysis of U.S. press coverage of North Korea nuclear issue: Focusing on the indexing hypothesis. Unpublished PH.D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5) '방송3사, 북핵 외신보도 미 중심서 못 벗어나.' 경향신문, 2006년 12월 1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이에 의제를 선점하려는 경쟁은 오히려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게다가 북한에 관한 정보는 무조건 감추고 보는 관료주의가 팽배해 오보가 줄지 않고 있다.

오보는 언론의 신뢰성에 타격을 줘 결국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럽게 만든다. 오보는 정책입안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손실을 끼치게 된다.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설득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언론사는 최대한 '복수 취재원 확인원칙' (Two Source's Rule)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 직접 취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취재원 한 명으로부터 확인한 사실이 오류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도 북한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자세로 돌아서는 게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측면에서 이익이 될 것이다.

4. 북한 핵 문제의 이중성

국방연구원의 김태우 박사는 북한 핵 문제의 이중성이 한국 사회의 딜레마라고 분석한다.⁶⁾ 김태우 박사에 따르면 핵 문제의 주요 변수는 개혁시각과 보수 시각의 대립이다. 개혁시각에서는 북한을 동족으로 바라보고 미국을 패권세력이라고 간주한다. 이들의 관점에서는 핵확산방지조약이 제국주의 장치에 해당한다. 반면에 보수시각에서는 북한이 주적이고 미국은 동맹국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NPT는 긴요한 국제질서로 여겨진다.

〈북한 핵 문제의 이중성〉

주요변수	개혁 시각	보수 시각
북한	동족	주적
미국	패권세력	동맹
NPT	제국주의 장치	긴요한 국제질서

북한 핵문제의 이중성 관점에서 봤을 때 일부 국내 언론사의 편집방향은 개혁시각과 보수시각으로 확연히 구분될 수 있다. 개혁시각을 갖고 있는 언론사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경협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은 보수 시각에 서있는 언론사와 크게 다를 수 밖에 없다. 김태우 박사는 현실적으로 양쪽 시각이 모두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책의 좌표는 '국익'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6) 김태우, (2006), 핵에 대한 정책적 이해, 국방부 출입기자단 세미나 발표문, 5.

그런데 문제는 언론사의 편집 방향이 스트레이트 보도에 반영돼 객관적인 보도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fact)에 대한 논평과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실 전달 자체가 왜곡된다면 남북관계에 대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혼란을 부치길 수 있다.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한 장관은 최근 담당 기자들과의 사석에서 다음과 같이 깊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술과 담배도 북한에 수출을 못하는 현실에서 쌀과 비료 지원을 중단했는데 이것이 왜 미온적인가? 일본을 제외하고 어느 나라가 (북한과) 민간교류마저 끊겠다고 하나? 이런 현상을 보고 좌절한다. 이제는 최소한의 이성의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언제 올지 모르는 통일 시대를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한쪽 눈으로만 보았을 때 문제다... 미국도 거론 안 하는 개성공단, 왜 얘기하나? 제일 중요한 게 사실에 근거한 보도다. 역시 사실보도가 생명이고 그러면 대북 정책 오해 안 할 것이다.”

Ⅲ. 취재원

1. 비공식 브리핑 의존

현재 통일외교안보 관련 부처에서 이뤄지는 브리핑은 크게 공식과 비공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공식 브리핑은 방송 카메라의 촬영과 녹취가 허용되고 모든 발언과 현장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말한다. 주요 현안과 관련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해야 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비공식 브리핑은 배경 설명과 심층 배경설명, 사전 보도금지 등을 말한다. 배경설명(background)은 기사의 출처가 '정부 고위관계자' 등으로 익명 처리되면서 브리핑에 나온 내용이 국민에게 소개된다. 다음으로 심층 배경설명(deep background)은 어떤 형태의 인용도 허용도 안 되며, 기사에서는 '.....'으로 알려졌다'의 형식으로 전달된다. 남북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거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야 할 때 이러한 방식의 설명이 주로 이뤄진다. 또 사전 보도금지(embargo)는 내용을 미리 알려주되 일정 시점까지는 보도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전혀 보도를 할 수 없지만 언론인이 알아 둘 필요가 있거나 기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비보도 전체 발언(off-the-record)도 가끔 이뤄진다.

그러나 기자들은 언제나 사실 확인과 충분한 배경 설명에 목말라 있는 실정이다. 공식 브리핑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또 열리더라도 내용이 빈약한 경우가 허다하다. 관료들은 가능하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고 기자들은 여러 수단을 동원

해 이를 알아내 보도하려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관료들은 가능하면 백그라운드 또는 딥 백그라운드 형식의 브리핑을 통해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익명의 뒤에 숨어 편의적으로 언론을 대하려는 경향이 무척 심하다. 이런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 독자나 시청자 입장에서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이해를 높이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공론 형성도 부진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2. 취재 제한 조치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사의 취재를 제한하는 조치들이 잇따라 나왔다. 당국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매우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기자들은 갈수록 당국자들과의 교감 기회를 잃게 됐다. 참여 정부는 공식 브리핑을 활성화함으로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그러나 기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는 공식 브리핑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내용 역시 매우 빈약하다는 점이다. 통일부의 경우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정례 브리핑을 거의 개최하지 않고 있다. 별로 밝힐 게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는 간혹 기자들과의 티타임 형식으로 대체되고 있다. 물론 티타임은 배경설명이나 심청 배경설명의 형식을 요구한다.

게다가 일부 부처는 기밀사항이 언론에 노출됐다면 관련자 색출 조사를 벌이기도 한다. 이럴 때마다 관료들은 크게 움츠러든다. 이러한 취재 제한 조치로 발이 묶인 기자들은 결국 종합적인 판단능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공식적인 의사소통 채널이 단혀있는 상황에서 비공식적 의사소통 채널마저 봉쇄당하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해진다.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과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사회의 거울인 언론이 큰 흐름을 먼저 읽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북한 학자인 이우영 박사는 동서독의 통일과정에서 서독 언론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서독과 동독의 매스미디어 정책이 개방적인 데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⁷⁾ 정부도 언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못하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입안해도 이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대북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적 합의는 통일 정책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입니다. 우리의 진실이 빈번하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북 문제가 진지한 토론과 협의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이념과 정

7) 이우영, (2006). 북한 관련 보도 개선 방안. 북한·통일 전문연수. 한국언론재단주최. 2

치적 편견에 따른 정치 공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오늘의 세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지, 남의 탓을 하거나 체념해서 해결될 일을 아닙니다. 사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언론과 건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합니다.”⁸⁾

Ⅳ. 결 론

국가 안전과 직결된 북한 핵 문제는 13년 동안에 걸쳐 매우 복잡하게 전개돼 왔지만 언론의 대응은 1차 핵 위기가 발생했던 지난 1994년의 취재 관행을 거의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 오랫동안 복잡하게 진행된 사안이지만 언론사들은 대부분 순환 근무에 따른 출입처 중심의 취재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인력에 대한 투자도 여전히 인색하다. 특히 북한 핵 뿐 아니라 당국자 간 회담과 민간 교류, 탈북자 사태 등 담당 기자가 다뤄야 할 북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비중도 더욱 커졌지만 언론사들의 관행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는 심층적인 취재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자를 많이 배출하는데 실패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북핵 문제를 사건 보도 중심으로 풀아가는 관행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최영재 박사는 즐기세포 보도 사태를 분석한 거로가 사건뉴스 프레임 보도 관행이 문제로 드러났다면서 과학을 비롯해 정치·외교, 환경 등 어떤 사안이라도 모두 사건기사로 귀결시키려는 ‘깎때기’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이고 복잡한 이슈라도 단기적 사건처럼 다뤄 사회 주요 현안들이 사건에서 시작해 사건으로 흐지부지 끝나 버린다는 분석이다.⁹⁾ 이러한 사건뉴스 프레임이 되풀이 되는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건전한 공론의 장이 형성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치적으로 매우 중대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북한 핵 사태와 같은 보도는 더 이상 사건 프레임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6자회담이 재개된다고 해서 마치 모든 게 곧 해결되는 것처럼 흥분할 일도 아니다. 언론은 체계적인 분석과 객관적인 시각을 제시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분단시대의 언론인들에게는 철저한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 옛 서독은 공식적으로 통일 언론을 지향하지 않았고 이를 강제하는 분위기도 없었지만 서독 기자들은 동서독 간 긴장 완화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강

8) 이종석. (2006). 통일부 장관 이임사. 2006년 12월 11일.

9) 최영재. (2006). 황우석 사태에 대한 신문 분석. 황우석 사태와 언론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언론재단·방송학회 주최 세미나.

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⁰⁾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 분위기 조성 노력은 이념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남과 북 뿐 아니라 인류가 공통으로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편집 관점에 따라 사실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데스크와 취재기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보도국이나 편집국의 의사소통 구조가 훨씬 더 개방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저널리즘이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기자들이 양심에 따라 소신껏 의견을 제시하고 보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방적인 뉴스룸이 필수적이다.¹¹⁾

북한 핵이나 남북 관계 주요 현안들은 대부분 '정부 고위관계자' 등으로 익명 처리되고 있다. 때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정부는 가능하면 공식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국민에게 정책을 알리고 그 필요성을 설득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정책에 얼굴이 없다보니 독자나 시청자들은 현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건전한 여론 형성도 차단되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순간의 책임이나 부담을 벗어나기 위해 익명을 선호하지만 결국 정책에 대한 소유권(ownership) 부재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관료주의를 낳게 되고 정책의 대국민 설득과 국회 승인은 더욱 난항을 겪게 된다.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 안개 속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 정책이 국민 사이에 공감을 얻으면서 뿌리를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는 태도와 형식이 적극적인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기자들이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다양한 씽크탱크들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미국의 경우 행정부와 관련이 없는 엘리트 그룹이 언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으로 '계단식 여론 형성 모델'(cascading activation model)이 제시되기도 한다.¹²⁾ 엘리트 그룹은 정부로부터 비교적 독립적 입장에서 사안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항상 다양한 사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마감시간에도 쫓기는 기자들에게는 현안을 폭넓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요 통로가 된다. 또 언론사가 선택할 수 있는 인력 풀(pool)이 넓어지면서 사회에 다양한 견해를 제시할 수

- 10) 이우영, (2006). 북한 관련 보도 개선 방안, 북한·통일 전문연수, 한국언론재단 주최, 2-3.
- 11) Kovach B & Rosenstiel T. (2001). *The Elements of Journalism*. New York: Three Rivers Press 181.
- 12) Entman, R. M. (2003). Cascading activation: Contesting the White House's frame after 9/11. *Political Communication*, 20, 418.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복핵 문제와 관련해 독립적인 엘리트 계층이 존재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연구소들은 대부분 관변 성격이 짙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객관적 분석을 요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언론사의 정부 관료 의존을 줄이고 다양한 목소리의 반영을 위해서는 엘리트 계층을 더욱 넓히려는 사회적 요구된다.

〈참고 문헌〉

- ‘방송3사, 북핵 외신보도 미 중심서 못 벗어나.’ 경향신문. 2006년 12월 1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 김태우. 2006. 핵에 대한 정책적 이해. 국방부 출입기자단 세미나 발표문 5.
- 이우영. 2006.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 필요. 『신문과 방송』 2005년 1월호. 73.
- 이우영. 2006. 북한 관련 보도 개선 방안. 북한·통일 전문연수. 한국언론재단 주최. 2.
- 이우영. 2006. 북한 관련 보도 개선 방안. 북한·통일 전문연수. 한국언론재단 주최. 2-3.
- 이종석. 2006. 통일부 장관 이임사. 2006년 12월 11일
- 이철기. 2005. 맹목적으로 베끼고 앞장서 부풀리고. 『신문과 방송』 2005년 7월호. 111
- 최영재. 2006. 황우석 사태에 대한 신문 분석. 황우석 사태와 언론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언론재단·방송학회 주최 세미나
- Entman, R. M. 2003. "Cascading activation: Contesting the White House' s frame after 9/11". *Political Communication*, 20, 418.
- Kovach B & Rosenstiel T. 2001. *The Elements of Journalism*. New York: Three Rivers Press.
- Lee, K. Y. 2005. *A content analysis of U.S press coverage of North Korea nuclear issue: Focusing on the indexing hypothesis*. Unpublished PH.D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Shoemaker, P. J. & Rosse, S. D. 1992.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2nd edition. New York: Longman.